

군관협력담당관 제도 활용으로 군사규제 완화

사업구분	임기 내	신규	총사업비	101.5백만원
------	------	----	------	----------

□ 개요

- 군관협력담당관 제도 활용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해소하고자 함.

□ 목표

- 군관협력담당관 제도 활용으로 군사규제 완화.

□ 계획(안)

- 고양시는 전체면적의 41%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관협력담당관 제도를 활용하여 군사규제를 완화하고자 함.

□ 추진계획

-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110km² 중 해제 가능성 있는 지역을 관할 부대와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규제완화 검토 추진
-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탁 추진 절차
고양시 신청 ⇒ 관할부대 검토 ⇒ 합참심의 ⇒ 국방부 승인

□ 연도별 추진계획

단위사업	'18	'19	비고
군관협력담당관 제도 활용으로 군사규제 완화	해제가능성 있는 지역 22% 중 14%에 대한 군사 시설보호구역 해제 추진	잔여 물량(8%) 구간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(공약 이행 완료)	지속추진
	관할사단 및 합동참모본부 심의, 국방부 승인 절차		

□ 연도별 사업비

(단위 : 백만원)

단위사업	구분	계	기투자	'19	'20	'21	'21.6월	임기후
군관협력 담당관		101.5	0	29	29	29	14.5	
	국비							
	도비							
	시비	101.5	0	29	29	29	14.5	
	기타							

□ 쟁점 및 대책

○ 쟁점

- 군 관련 사항은 작전성검토 등 고도의 전문성, 보안성 등으로 일반 공무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 합동참모본부, 국방부와 소통의 채널이 필요.
- 군부대 특성상 각종훈련, 보안점검 등을 이유로 장기간 협의가 지연되어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이 어려움
- 군 관련 군사규제의 합리화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사분야 경력자의 조정·소통 역할 필요

○ 대책

- 군관협력담당관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정비, 군부대 이전 및 부지활용, 주민재산권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함.